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영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5.

발 의 자 : 김영식 · 박성중 · 김정재
김상훈 · 주호영 · 태영호
최형두 · 金炳旭 · 이종성
김용관 · 박성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최근 기업 정보 유출,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기업 및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.

이와 같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사사고의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그 원인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등 후속 대응조치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유사한 침해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조치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.

한편, 대량의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어 국민의 정보 유출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 근거가

미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스미싱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중지를 요청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근거를 마련함(안 제47조의6 신설).

나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현행법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, 관계기관의 장은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공유하도록 함(안 제48조의3).

다.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관련 자료 보존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(안 제48조의4).

라. 스미싱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전화번호 차단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49조의2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6(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)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, 정보통신망연결기 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(이하 “정보보호 취약점”이라 한다)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”을 “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가 있으면 전단”으

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없이 공유하여야 한다.

제48조의4제1항 중 “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”를 “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”를 “발생한 경우, 제2항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”를 “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본문 중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”를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”로,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”를 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”로, “제2항”을 “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”

를 “구성·운영,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·절차”로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49조의2제3항제3호 중 “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”을 “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접속경로의 차단

나.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

다.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

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제3항제7호 중 “평가·인증”을 “평가·인증,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인증,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”으로 한다.

제76조제3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2호 중

“제48조의4제4항”을 “제48조의4제5항”으로 한다.

11의3.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
제출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
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7조의6(정보보호 취약점 신고</u> <u>자에 대한 포상) ① 정부는 침</u> <u>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</u> <u>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,</u> <u>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</u> <u>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</u> <u>(이하 “정보보호 취약점”이라</u> <u>한다)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</u> <u>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</u> <u>대상·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</u> <u>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</u> <u>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</p> <p>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</u> <u>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</u> <u>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</u> <u>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</u> <u>이 경우 「정보통신기반 보호</u> <u>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</u></p>	<p>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</p> <p>① <u>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 <u>-----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</u> <u>사고 통지 또는 신고가 있으면</u></p>

가 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
한 것으로 본다.

1.·2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제48조의4(침해사고의 원인 분석
등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
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
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
산을 방지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전단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
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
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
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
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없
이 공유하여야 한다.

제48조의4(침해사고의 원인 분석
등) ① -----

----- 분석하고 그 결과에
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
여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
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---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
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
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
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응, 복구
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
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
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·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2항에 따른 민·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

권고할 수 있다.

③ -----

----- 발생
생한 경우, 제2항에 따른 원인
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
요하면 -----

--.

④ -----
----- 원인
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
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
--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
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----
--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----

----- 중대
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
원 또는 제2항-----

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·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,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.

⑥ 제2항에 따른 민·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의2(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) ①·② (생략)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

-----.

-----.

⑥ ----- 제5항-----

-----.

⑦ 제3항-----
---- 구성·운영, 제5항에 따라
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
방법·절차 -----
-----.

제49조의2(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52조(한국인터넷진흥원) ① · ②

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-----

가. 접속경로의 차단

나.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
다.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(한국인터넷진흥원) ① · ②

<p>(생략)</p> <p>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, 정보보호시스템 <u>평가·인증</u> 등 정보보호 인증·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</p> <p>8. ~ 22. (생략)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 <p>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·2. 삭제</p> <p>2의2. ~ 11의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2. <u>제48조의4제4항</u>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</p> <p>12의2. ~ 25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<u>평가·인증,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,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진단</u> -----</p> <p>8. ~ 2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2의2. ~ 11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의3. <u>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</u></p> <p>12. <u>제48조의4제5항</u>----- ----- -----</p> <p>12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